

# 삼성 앞장선 국내 R&D 투자 '역대최대' 기록

## 2024 R&D 투자기업 분석

투자액 총 83.6조... 전년비 15% ↑  
상위 10개 기업이 65% 집중 투자  
삼성전자 30조... 투자 확대 주도  
글로벌 순위선 여전히 후순위

우리 기업들의 지난해 연구개발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상위 기업들의 투자집중도가 더욱 심화하면서 기술혁신 생태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국내 연구개발 투자상위 1000대 기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국내 기업들의 총 R&D 투자액은 8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72.5조원) 대비 15.3% (11.1조원) 증가한 수치로, 2010년 통계 발표 시작 이래 최대 규모다.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도 4.8%로 전년(4.4%) 대비 0.4% 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기업 매출 증가율보다 R&D 투자 증가율이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상위 기업들의 투자 집중도는 더 커

(2024년 R&D 투자액 10대 기업 목록)

(단위:억원)

순위	기업명	기업규모	R&D 투자액		'24년 매출액
			'24년	'23년	
1	삼성전자	대	301,580	238,528	2,090,522
2	SK하이닉스	대	44,723	36,298	557,363
3	현대자동차	대	43,059	37,406	790,608
4	엘지전자	대	34,058	32,748	307,626
5	기아	대	32,766	26,561	632,567
6	삼성디스플레이	대	30,533	27,560	254,014
7	엘지디스플레이	대	19,753	18,610	251,787
8	현대모비스	대	18,379	16,398	366,040
9	삼성에스디아이	대	12,749	11,097	160,978
10	엘지에너지솔루션	대	9,830	9,280	79,267

졌다. 상위 10개 기업의 총 R&D 투자액은 54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62.7%) 대비 2.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상위 300개 기업이 전체 투자의 92.4%를 차지한 반면, 하위 300개 기업의 비중은 2.2%에 불과해 기업 간 투자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대기업의 총 R&D 투자액은 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했고, 중견기업 총 투자는 1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중소기업 총 투자액은 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기업들의 R&D 투자 규모가 75조원으로 전체의 89.8%를 차지했다. 제조업 내에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분야가 43조4000억원(57.8%)으로 가장 컸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12조3000억원(16.4%), 전기장비 6조8000억원(9.0%) 순이다.

가장 많은 R&D 투자를 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작년 30.2조원을 투자해 전년 대비 6.3조원 증가했다. 이는 1000대 기업 전체 투자 증가분(11.1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R&D 투자 규모 1조원 이상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4.5조원), 현대자동차(4.3조원), LG전자(3.4조원), 기아(3.3조원), 삼성디스플레이(3.1조원), LG디스플레이(2조원), 현대모비스(1.8조원), 삼성SDI(1.3조원) 등 9개사로 전년과 동일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글로벌 측면에선 여전히 아쉬운 상황이다. EU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연구개발 투자 20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40개에 그쳤다. 이는 미국(681개), 중국(524개), 일본(185개), 독일(106개), 대만(55개)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이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지금은 경쟁국에 대응해 이러한 흐름을 지속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고, 투자성과가 시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실증 인프라, 금융지원 등 사업화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 배달앱 입점사 '원산지 표시' 단속

서울 지역의 배달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실시된다. 앞서 석 달 전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 단속에서 배달앱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수가 90개소가 달한 바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6~27일 단속 인력 20개반 42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해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농관원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시키거나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국가산을 판매하는 경우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적발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자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韓 방산 '불안한 호황'... '트럼프 리스크' 장기 전략 시급

## NATO 재무장에 단기 수출 확대 美 방위비 압박, 협력 위축 우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 방위산업계에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찾아왔다는 진단이 나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재무장으로 단기적 수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한미 방산협력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성장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저자 심순형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대응해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재무장에 나서면서 한국 방산 업체들에게는 단기적 기회가 열렸다. 유럽연합은 8000억 유로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고, 2024년 글로벌 국방예산은 2조 7000억달러로 전년 대비 9.3% 급증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개별 국가의 긴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백악관에서 차세대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골든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P/뉴시스

구매가 늘어나면서 유럽연합의 공동조달 비중이 목표치 35%에 한참 못 미치는 18%에 그치는 상황은 한국 방산업체들에게 기회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유럽방위청(EDA)이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조달 및 역내 방산협력이 현실화되면, 2030년 내 한국 방산업체들이 누리던 반사이익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한미 방산협력에 미칠 악영향이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11억3000만달러

인 한국의 방위비 부담금을 100억 달러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 GDP 대비 0.07% 수준이며, 일본(0.04%), 독일(0.003%)에 비해 이미 높은 수준이다.

방위비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경우 첨단 무기체계 공동개발, 미국 방산 공급망 진입 등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논의되었던 한미 방산협력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현재 진행 중인 대량 살상무기(WMD) 제거 로봇, 이시스 전투체계, 고고도장기체계공무인기(HAL E UAV) 등 무기체계 공동개발도 지연될 수 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에도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대응책으로 '합정 MRO(유지·보수·정비)' 협력을 제시했다. 합정 MRO는 미국의 취약한 공공망 분야 중 하나로, 이를 방위비 분담금 압박 대응과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협상 체결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RDP-A는 바이든 정부 시절 협정 체결에 착수했으나 현재 진행 상황이 불투명한 상태다.

일본이 SM-3 무기체계 공동개발 과정에서 RDP-A를 체결한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한미 경제·무역 협의에서 RDP-A를 협상 안건에 포함시키고 합정 MRO 등 구체적 협력사업을 통해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더라도, 분담금 집행방식을 변경해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분담금을 미군이 일괄 집행하는 현재 방식에서 한국이 직접 집행하는 계정의 비중을 늘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농식품부, 여름철 채소 수급안정책 논의

농축산물식품부가 12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년 제4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여름철 배추·무 수급안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폭우

·폭염 등 기상재해로 주요 채소류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선제적인 수급안정대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여름철 배추·무 수급안정을 위한 봄 작형 수매비축 확대, 예비

모 공급 등 여름 작형 생육 관리 지원 및 계약재배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공급 과잉인 2025년산 양파의 수급안정을 위한 수매비축, 출하시기 조절, 수출 확대 등의 수급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생산자, 소비자, 정부, 학계가 함께 협력하는 장

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위원들 모두가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여름철을 앞두고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걱정이 많으신 만큼 선제적인 대응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환경부 집중호우 대피방송 국립공원 17곳 확대

주요 국립공원에 집중호우에 대비될 경우 예상 50분 전에 대피 안내 방송이 송출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등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레이더가 구름 아래 비의 양을 면적 단위로 관측해 국지성 집중호우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립공원 내 자동우량경보시설과 연동해 사전 대피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산악지형이 많은 국립공원 특성상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계곡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조기 대피를 위한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강우레이더 예측 자료의 적용성을 검토했고, 2023년에 강우레이더와 국립공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연동해 사전 대피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환경부와 공단은 이 시스템이 인명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전국 17개 산악형 국립공원 44개 지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탐방객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을 수립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144곳, 재난취약지구 915곳의 점검을 완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